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소식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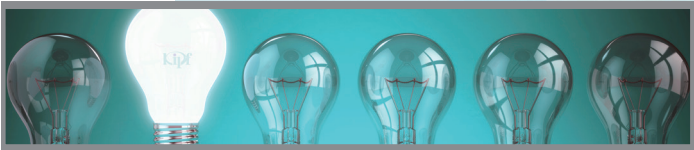
2021년 제1호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www.kipf.re.kr/panel/](http://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 재정패널 소식지

2021년 제1호

재정패널조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조사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조세·복지 현황 등을 파악하고, 관련 정부 정책의 효과 검증을 위해 설계된 패널조사입니다.

## Contents

재정패널 소개	04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06
SMART NaSTaB 안내	07
재정패널 상반기 소식	08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11
2020년 재정패널 활용 연구	21

## 재정패널 소개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 조세·재정·공공기관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사·분석함으로써 국가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 ■ 재정패널조사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200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전국단위의 종단조사
- 조세 및 재정 정책의 효과 검증, 가계 조세부담 및 복지수혜 현황 파악을 목적으로 설계
- 2021년 현재 14차년도 조사 준비 중

### ■ 조사 대상

- 전국 15개 시도에서 추출된 5,634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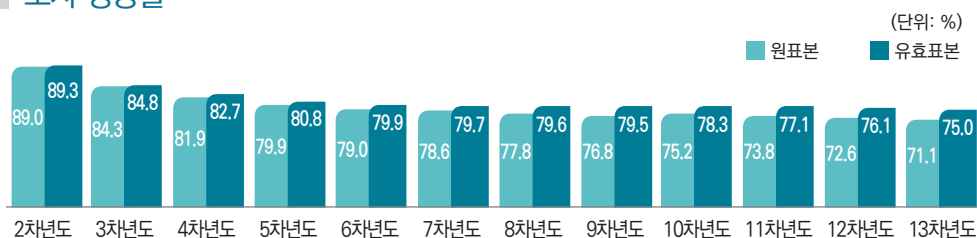
### ■ 조사 영역

- 납세 및 복지, 지출 및 소득, 자산 및 부채, 경제활동상태, 소득공제내역, 사회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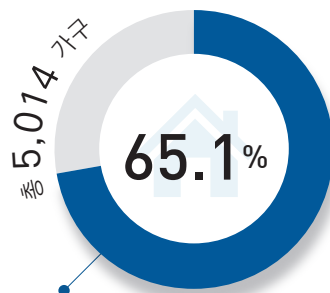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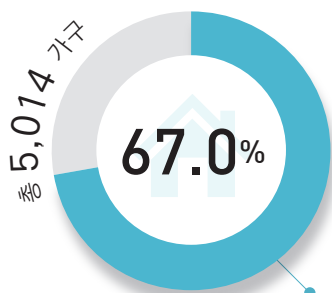
### ■ 조사 특징

- 1) 납세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을 통한 자료 생성
  - 근로소득자와 종합소득자의 소득신고서류 수집
  - 항목별 소득공제액 또는 세액공제액, 결정세액 정보 제공
- 2) 안정적으로 패널을 유지하며 매년 높은 조사 성공률 보유
- 3) 개인의 사회 및 납세제도에 대한 인식조사 수행

## 조사 성공률



- 원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유효표본 조사 성공률: 전체 가구 중 조사가 불가능한(사망, 해외이민) 가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산출한 조사 성공률



## 문의처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044-414-2473  
panel@kipf.re.kr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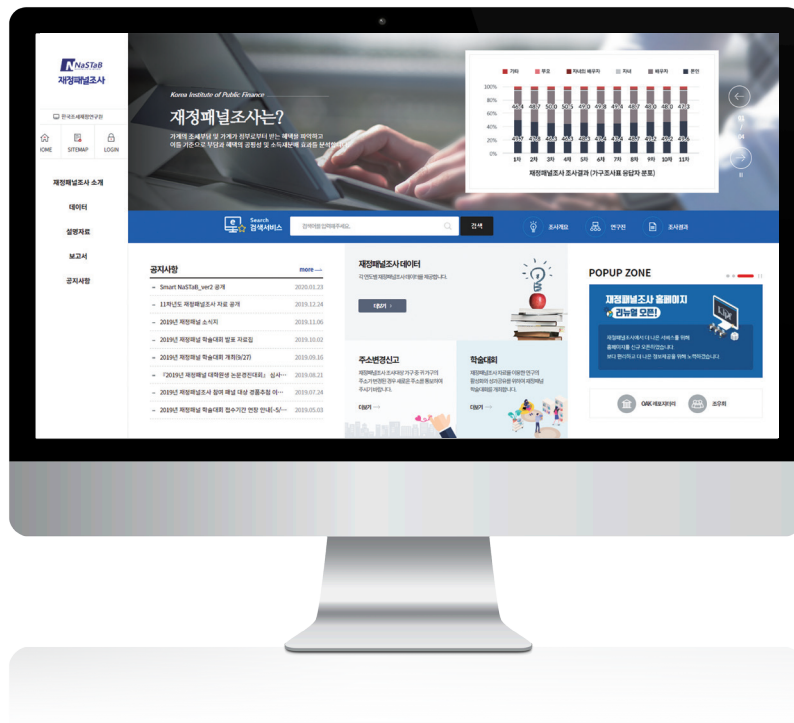
## 재정패널 공식자료 이용안내

### 재정패널 공식자료

- 1) 제공 범위: 1~12차 데이터, 기초분석보고서, 테크니컬 리포트
- 2) 제공 방식: 공식 홈페이지 및 KOSIS를 통한 주요 결과 공개
- 3) 2021년 4월 현재, 14차 재정패널조사 준비 중

###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 이용자 편의를 위해 재정패널 공식 홈페이지 개편
- 간단한 연구 관련 정보 입력 후 자료 및 보고서 다운로드 가능



# SMART NaSTaB 안내

재정패널  
소식지

## SMART NaSTaB란?

- 재정패널자료의 가공 시간을 단축시키고, 오류 없는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해 구축한 STATA 프로그램

## SMART NaSTaB 프로그램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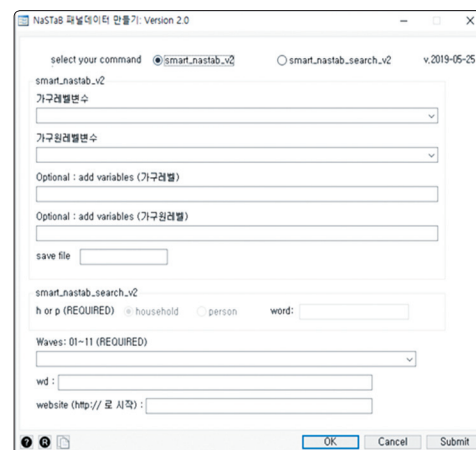
- 연도별, 가구별, 가구원별 데이터 병합
- 소득 및 지출 등 생성 변수 추출

## SMART NaSTaB 다운로드

-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SMART NaSTaB\_ver2(다운로드)

## SMART NaSTaB 이용

- STATA 13.0버전 이상에서 구동 가능
- 대화창 및 명령구문을 통해 활용 가능



〈 대화창을 통한 SMART NaSTaB 이용화면 〉

## 재정패널 상반기 소식

### 재정패널 이슈

- 12차년도 재정패널 공식 자료 공개
  - 2020년 12월, 12차년도 재정패널 자료가 홈페이지([kipf.re.kr/panel/](http://kipf.re.kr/panel/))에 공개되었습니다.
  -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14차년도 재정패널 현장 조사 실시
  - 2021년 14차년도 조사가 5월부터 진행됩니다.
  - 패널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행사 소식

- 2021년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개최
  - 개최 일시: 2021년 5월 13일(금) 15:00~16:30
  - 개최 장소: 온라인 개최
  - 참가 접수: ~ 5월 9일(일)
  - 참가 접수 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고

### 논문 모집

-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원고 모집
  - 2021년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에 참가할 우수한 원고를 모집합니다.
  - 연구계획서 모집기간: ~ 5월 30일(금)
  - 참가 신청 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 ▶ 공지사항 ▶ 학술대회에서 연구계획서 제출

# 2021 데이터 설명회 개최

재정패널  
소식지

## 2021 데이터 설명회

- 1) 일 시: 2021년 5월 13일(목) 15:00~16:30
- 2) 장 소: Webex를 통한 온라인 개최
- 3) 데이터 설명회 프로그램

시간	내용
15:00~15:20	재정패널 조사자료 안내 -자료의 이해와 데이터 구성 소개
15:20~16:10	재정패널 조사자료 유의사항 안내 -설문지 구성 소개 -데이터 구조 및 변수, 예제파일 STATA 실습
16:10~16:30	질의 응답

## 신청방법

- 홈페이지 ▶ 공지사항 데이터설명회 게시글에 안내되어 있는 신청폼 작성
- 신청 마감: 2021년 5월 9일(일요일)까지
  - \* 별도의 참가비용은 없습니다
  - \* 사전 신청자에게만 접속링크 안내 예정입니다

## 문의 및 신청

- 재정패널 DB 사업팀: 044-414-2473/2394
- 재정패널 이메일: panel@kipf.re.kr
- 재정패널 홈페이지: <https://www.kipf.re.kr/panel/>

# 2021 재정패널 학술대회 및 대학원생 논문 경진대회



## 일반연구자 학술대회

- 대상논문: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참가자격: 관련 연구기관 및 학계 연구자
- 원 고 료: 논문 제출 후 발표 시 100만원 지급

## 일 정

- 재정패널 데이터 설명회: 2021년 5월 13일(목)  
(추후 상세일정은 홈페이지 공지)
- 연구계획서 모집 마감: 2021년 5월 30일(일)
- 최종 논문 제출 마감: 2021년 9월 30일(목)
- 학 술 대 회: 2021년 11월 12일(금)

## 문 의

- 재정패널 DB 사업팀: ☎ 044-414-2473/2394  
✉ panel@kipf.re.kr  
🌐 <https://www.kipf.re.kr/panel/>

## 대학원생 논문경진대회

- 대상논문: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한 학술논문
- 참가자격: 국내외 대학원 재학생 또는 휴학생(졸업예정자 포함)
- 상 금: 최우수상(○편, 200만원)  
우 수 상(○편, 100만원)  
장 려 상(○편, 70만원)

## 신청(공통)

- 신청서류: 연구계획서
- 제출방법: 재정패널 홈페이지(<https://www.kipf.re.kr/panel/>)를  
통해 연구계획서 제출

#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재정패널  
소식지

## 표본 구성

• 12차년도 표본구성(유효표본 기준)

(단위: 가구)

구분	최초 표본가구	추가 표본가구	2~12차년도 분가가구 추적	2018년 6월 이전 분가가구	2018년 7월 이후 분가가구*	총합계
전국	3,603	487	642	33	59	4,824

\* 2018년 7월 이후 분가가구는 2020년 조사 시점부터 정식 유효 표본으로 인정됨

• 표본가구 유지율

(단위: 가구, %)

구분	총 가구 수	2019년도 추적조사 성공 표본 수	유지율
원표본	5,634	4,090	72.6
유효표본	5,373		76.1

12차년도 조사 결과 최종적으로 총 4,824가구가 표집되었다. 2008년도에 구축되었던 원패널가구 5,634가구 중 2019년에도 조사에 성공하여 패널로 유지된 가구는 모두 4,090가구로, 원표본가구 유지율은 72.6%이다. 한편, 소멸가구(해외거주 및 사망 등)를 제외한 총 유효표본 5,373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한 유효표본 유지율은 76.1%이다.

## 표본가구 인구학적 특징

• 가구원 수

(단위: %)

진행차수(조사시점)	1명	2명	3명	4명	5명 이상
11차(2018년)	25.8	27.5	24.5	17.1	5.1
12차(2019년)	26.7	28.4	23.6	16.5	4.8

12차년도 조사에서 가구는 2018년 한 해 동안 6개월 이상 함께 살았던 가족으로 정의한다. 단, 6개월 이상 동거한 가족 및 친척은 가구원에 포함시켰으며 6개월 이상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대학생 이하의 미혼 가구원이 학업을 목적으로 분가한 경우와 원양어선이나 기숙사 등 수용시설에 있는 가구원인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인정하였다.

• 가구주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진행차수 (조사시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1차(2018년)	69.3	30.7	4.2	14.9	26.3	17.3	37.3
12차(2019년)	68.9	31.1	5.6	15.4	24.8	17.4	36.8

2019년 조사에서 가구주의 성별은 11차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주 연령대는 '20~30대'의 비율이 높아진 반면, 40대의 비율은 소폭 감소하였다.

##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가구원의 성별 및 연령대

(단위: %)

진행차수 (조사시점)	성별		연령대					
	남자	여자	19세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11차(2018년)	46.6	53.4	21.0	9.8	13.3	19.0	12.7	24.1
12차(2019년)	47.0	53.0	20.7	10.8	14.0	18.0	12.6	23.9

가구원 중에서는 여자의 비중이 더 높았으며, 연령대별로는 10대와 60대 가구원의 비중이 높았다.

### ■ 가구 조사표 결과 요약

#### •가구 평균 연소득

(단위: 만원)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연간 총소득		5,100.3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항목	전체가구 평균 금액
근로소득	3,310.7	양도소득/손실	
사업소득	1,002.8	양도소득	1.4
부동산 임대소득		양도손실	1.2
토지	7.0	보험급여	
주택	67.2	사회보험 급여	183.7
상가 및 사무실	78.3	민간보험 급여	64.2
기타	1.2	정부지원	
이자 및 배당소득	16.1	정부지원 현금소득	99.6
기타소득		퇴직 관련 급여	
타 가구 이전소득	105.7	특수직 퇴직연금	56.0
노인요양특별급여	0.1	특수직 퇴직일시금	2.2
그 외 기타소득	56.3	개인형 퇴직연금	0.5
		개인형 퇴직연금(일시금)	30.8

재정패널 표본가구 전체의 평균 연간소득을 구하기 위해 가구원 조사표에서 조사된 연간 소득의 총금액을 총 유효표본 가구 수(4,765가구)로 나누어 보았다. 이때 소득 금액을 정확히 밝히지 않은 무응답 가구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석 결과 재정패널조사 전체 표본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5,100.3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중 근로소득이 평균 3,310.7만원이었으며, 사업소득이 1,002.8만원으로 나타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가구 소득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가구 금융자산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
	비율	평균 금액	
은행 등 금융기관 예·적금	82.0	3,663.1	3,004.8
펀드 가입 금액	3.1	9,496.5	289.6
채권 보유 금액	0.3	7,836.0	20.3
주식 보유 금액	5.0	5,543.9	276.6
저축성 보험, 연금성 보험	9.1	2,625.8	240.0
연금저축	7.5	2,578.0	193.5
빌려준 돈	1.0	4,553.7	43.8
기타 금융자산	0.7	10,115.7	72.2
금융자산 총액			4,140.9

금융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 '금융기관 예·적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82.0%로 나타났으며, 해당 가구의 평균 '예·적금' 금액은 3,663.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표본 가구의 금융자산 평균 총액은 4,140.9만원으로 나타났다.

## •가구 부동산자산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자산
	비율	평균 금액	
거주 자가주택의 시가총액	53.4	28,519.1	15,241.7
거주주택 외 보유주택	11.8	37,070.1	4,346.1
주택 전월세 보증금(거주)	46.0	9,626.5	3,463.1
주택 전월세 보증금(비거주)	0.3	9,646.0	33.1
비주택 전월세 보증금	4.0	3,617.7	145.9
부동산자산 총액			23,228.8

부동산자산이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에 현재 거주 중인 자가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53.4%였으며, 해당 가구의 '거주 자가주택 시가총액' 평균 금액은 약 2억 8,519.1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표본 가구의 부동산자산 평균 총액은 2억 3,228.8만원으로 나타났다.

##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가구 부채

(단위: %, 만원)

항목	해당 가구		전체 가구 평균 부채
	비율	평균 금액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2.3	7,857.8	176.8
학자금 대출	0.6	1,483.2	9.5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	17.0	11,354.5	1,935.0
금융기관 대출	10.6	6,692.2	709.0
신용카드 대출	1.16	4,394.2	51.0
전세금/보증금	9.8	14,707.9	1,411.3
기타	1.1	6,687.8	75.6
<b>부채 총액</b>			<b>4,364.7</b>

가구 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 중 '금융기관 주택담보 대출'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가구의 비중은 17.0%였으며, 해당 응답 가구의 주택담보 대출 평균 금액은 1억 1,354.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부채는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금액인 '전세금/보증금'이 존재하는 가구의 비중은 9.8%이며, 해당 가구의 '전세금/보증금' 평균 금액은 1억 4,707.9만원가량이었다. 전체 가구의 평균 부채 금액은 4,364.7만원으로 나타났다.

### ■ 가구원 조사표 결과 요약

#### •소득활동 현황

(단위: %)

소득활동함		소득활동하지 않음	
77.7		22.3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구직	비구직
72.6	27.4	11.4	88.6

가구원 조사표에 응답한 가구원 중 소득활동을 하는 가구원의 비율은 77.7%로 나타났고, 이 중 임금근로자의 비율은 72.6%, 비임금근로자의 비율은 27.4%로 나타났다.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가구원도 임대소득, 금융소득, 정부지원금 등이 있으면 가구원 조사표의 조사대상이 되므로 소득활동이 없는 가구원이 조사된 경우는 22.3%이며, 이 중 11.4%는 일자리를 찾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 •경제활동 상태

(단위: %)

구분	세부항목	분포
종사상 지위	상용직 근로자	54.9
	임시직 근로자	11.0
	일용직 근로자	6.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0.1
	고용원을 둔 사업주	3.8
	무급 가족 종사자	3.5
근무시간 형태 (임금근로자)	전일제	88.7
	시간제	11.3

현재 소득 활동 중인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근로자'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근무시간 형태는 응답자 대부분이 '전일제(88.7%)'로 나타났다.

•가구원 연간 소득

(단위: %, 만원)

항목	소득 가구원		조사 가구원 평균 금액	
	비율	평균 금액		
근로소득	60.9	3,442.7	2,097.9	
사업소득	18.5	3,415.7	633.4	
부동산 임대소득	토지	0.4	1,060.1	4.4
	주택	3.9	1,089.9	42.6
	상가 및 사무실	1.4	3,486.9	49.6
	기타	0.1	1,584.3	0.8
이자 및 배당소득	2.7	385.7	10.2	
기타소득	타가구 이전소득	12.3	544.2	67.0
	노인요양특별급여	0.0	240.0	0.1
	그 외 기타소득	3.4	1037.7	35.7
양도소득 /손실	양도소득	0.2	547.6	0.9
	양도손실	0.2	489.2	0.8
보험급여 /정부지원 /퇴직급여	사회보험 급여	13.5	587.1	79.5
	민간보험 급여	5.3	392.3	20.9
	정부지원 현금소득	20.2	320.6	63.7
	특수직 퇴직연금	1.4	2,564.4	35.3
	특수직 퇴직일시금	0.1	3,068.3	1.4
	개인형 퇴직연금	0.5	3,000.0	0.3
개인형 퇴직금(일시금)	36.3	2,357.0	19.5	
연간 총소득			3,164.0	

가구원 개인 연간 소득은 근로소득(60.9%)과 사업소득(18.5%)이 높았으며, '정부지원 현금소득(20.2%)' 비율도 높았다. 근로소득 가구원의 평균 금액은 3,442.7만원, 사업(순)소득 평균 금액은 3,415.7만원이며, 가구원 연간 총소득은 3,164만원으로 조사되었다.

##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가구원 의식조사 결과 요약

#### • 조세·복지제도에 대한 인식

##### ▷ 본인 세부담 평가

(단위: %)

구분	항목	분포
본인 경제적 능력 대비 세부담 평가	매우 많이 납부한다	5.3
	약간 많이 납부한다	35.6
	적절하게 납부한다	53.3
	약간 적게 납부한다	4.6
	매우 적게 납부한다	1.3
본인 납부 세금 대비 정부 혜택 평가	매우 높은 수준	0.3
	약간 높은 수준	8.8
	적당한 수준	45.2
	약간 낮은 수준	35.3
	매우 낮은 수준	10.5
소득 유사 그룹 대비 본인 세부담 평가	매우 높은 수준	3.6
	약간 높은 수준	33.5
	적당한 수준	58.0
	약간 낮은 수준	4.1
	매우 낮은 수준	0.8

본인의 세금 부담에 대한 평가에서는 적절하게 납부한다는 응답이 53.3%로 가장 높았으며, 세금 대비 정부의 혜택에 대해서는 '적당한 수준(45.2%)', '약간 낮은 수준(35.3%)'의 순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소득 그룹 대비 본인의 세부담에 대해 '적당하다'라는 의견이 58.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약간 높은 수준(33.5%)'이 뒤를 이었다.

##### ▷ 소득격차 및 정부 역할에 대한 인식

(단위: %)

구분	항목	분포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크다	36.4
	약간 크다	49.7
	보통이다	13.5
	별로 크지 않다	0.3
	전혀 크지 않다	0.0

구분	항목	분포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매우 커질 것이다	38.8	
	약간 커질 것이다	46.6	
	보통이다	13.7	
	약간 작아질 것이다	0.9	
	매우 작아질 것이다	0.0	
소득 격차 줄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	정부 정책 ↑ ↓ 개인 노력	①	22.2
		②	45.9
		③	26.6
		④	4.5
		⑤	0.8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 수준에 대한 질문에서 격차가 크다는 응답이 86.1%(매우 크다+약간 크다)로 계층 간 소득 격차가 크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우리나라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85.4%로 소득 격차에 대해서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 비교 평가

(단위: %)

구분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수준	바람직한 수준
저부담-고복지	3.2	6.5
중부담-고복지	8.0	29.0
고부담-고복지	2.6	5.7
저부담-중복지	11.4	9.9
중부담-중복지	39.2	43.7
고부담-중복지	8.5	1.6
저부담-저복지	5.7	1.4
중부담-저복지	17.3	2.1
고부담-저복지	4.2	0.2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에 대한 비교 평가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평균 수준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수준 모두 중부담-중복지가 각각 39.2%, 43.7%로 조사되었다.

세금 부담과 복지 수준 평가에 대해 바람직한 수준은 '중부담-중복지'에 이어 '중부담-고복지(29.0%)'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 12차년도 재정패널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요약

### •납세 관련 태도

▷ 위험회피: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의향

(단위: %)

A. 예금상품	B. 펀드상품	비율
0원	1억원	2.5
1천만원	9천만원	2.0
2천만원	8천만원	2.3
3천만원	7천만원	3.1
4천만원	6천만원	4.8
5천만원	5천만원	13.1
6천만원	4천만원	5.7
7천만원	3천만원	7.4
8천만원	2천만원	7.4
9천만원	1천만원	6.0
1억원	0원	45.8

투자 성향을 살펴보면, 1억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안전한 예금상품에 모두 투자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의 45.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재정패널조사는 조사대상이 동일한 패널조사로, 현 연도와 조사결과에 대한 확인과정을 통해 보완될 수 있습니다.
- '해당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는 가구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체 가구'는 각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가구까지 포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재정패널 홈페이지([kipf.re.kr/panel/](http://kipf.re.kr/panel/))에 게시되어 있는 '12차년도 기초분석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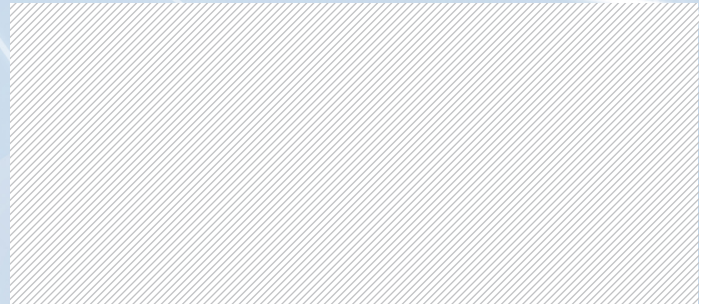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www.kipf.re.kr/panel/](http://www.kipf.re.kr/panel/)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20년

# 재정패널 활용 연구

최근 1년간 발표된 재정패널 활용 연구들의  
초록입니다.

### 사적연금 수요자의 행태 분석: 공적연금의 부족분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하고 있는가?

김대환·안장혁·성미연

『보건사회연구』, 40(2), pp. 556~580.

전 세계적으로 다층노후소득체계 측면에서 인구고령화로 인해 사적연금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 개인의 사적연금 수요 행태 측면에서 현실적으로는 공적연금을 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사적연금도 잘 준비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는 반면, 이론적으로는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이 미흡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 사적연금으로 보완하는 의사결정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사적연금 중에서도 가입 여부와 보험료 수준이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개인연금의 수요행태를 분석하였다. 재정패널자료(2013~2017년)를 활용해 로지스틱 확률효과모형과 로지스틱 이원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경제주체들은 공적연금에서 희망하는 연금액과 예상하는 연금액의 차이가 클수록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가입한 이후에도 노후 안정성을 위해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주체들이 사적연금을 수요하는 과정에서 공적연금에서의 부족분을 고려하고, 나아가 부족분이 클수록 사적연금을 더 많이 수요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R&D부문을 고려한 최적 실물투자 보조금 산정

김병우

『산업경제연구』, 33(3), pp. 897~927.

Grossman et al. (2013a, 2013b)은 시간변동(time-varying) R&D 보조금을 분석하면서, 지식스톡과 자본스톡의 시간경로에 대한 시나리오별로 시장균형 투자율의 시간경로를 분석하였다. 이후 Grossman et al. (2016)은 제품다양성 내생성장모형에 대한 모수설정을 통해 미국경제에 대한 최적 투자율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수 설정(calibration)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의 파라미터 값을 선택한 후 정부의 최적 R&D 지원정책 조합을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도출한 연구인력에 대한 임금비용 공제율은 10%였다. 또한, 민간 R&D에 대한 최적 보조금 비율은 27%로 도출되었다. 이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균형투자율은  $sav^*=14.6\%$ 로, 사회후생을 극대화하는 장기투자율은  $sa=22.84\%$ 로 도출된 데서 기인한다. 이는 한국의 중간재생산(예: 기계설비) 기업이 자본비용에 대해 법인세 산정 시 96% 정도의 공제(deduction)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즉 자본비용에 대한 최적 보조금비율이  $=36\%$ 임을 의미한다.

### 근로장려세제(EITC)가 납세의식에 미치는 영향 - 재정패널자료를 중심으로 -

김용수·노희천

『세무와회계저널』, 21(6), pp. 9~32.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이 그렇지 않은 가구원에 비해 제고되어 근로장려세제가 납세순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또한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액이 많을수록,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납세의식이 제고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의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의 가구원과 납세의식에 차이가 있었다.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은 비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적고, 경제적 능력이 비슷한 납세자들에 비해 세금부담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를 하는 경우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가 저소득층이므로 납부한 세금에 대한 손실을 크게 체감하지만 현행 근로장려금의 엄격한 수급기준에 비해 수급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으로 받는 혜택이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근로장려금을 수급한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을 많이 받은 수급 가구원은 적게 받은 수급 가구원보다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수급 가구원은 근로장려금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수급 가구원보다 본인이 납부한 세금에 비해 정부로 받는 혜택의 수준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더 많은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근로장려세제가 근로장려금 수급가구에 속한 가구원의 납세의식을 일부 제고하고 있다는 실증결과를 과세관청, 납세자, 세무대리인 등 세무행정 참여자에게 제시하였다는 공헌점이 있다.



###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 결정요인

신영호

『조세연구』, 20(3), pp. 89~113.

[연구목적] 본 연구는 납세자가 인식하는 우리나라의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결과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인식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재정패널 자료에서 복지수준과 조세부담 관련 변수를 구성하고, 순서화된 로짓 모형(Ordered Logit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 분석결과 복지수준 확대가 필요할수록 복지증세도 필요하다고 응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건강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과 예상수명이 길수록 복지확대는 필요하나 추가 조세부담 의향은 없다고 답할 확률이 높았다. 납세자의 복지에 대한 혜택 여부와 추가 조세부담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부의 세금사용의 공정성, 세금 신고·납부 관련 정보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응답자일수록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높았다. 정치적 성향이 보수적이거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적을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부정적인 경향이 높았으며, 소득격차 해결 주체로 정부 정책이 중요하다고 응답할수록 복지확대와 추가 조세부담에 긍정적일 확률이 높았다.

[연구의 시사점] 복지확대 시 추가 조세부담에 대한 조세저항을 완화시키는 방안으로 정부의 조세 집행의 공정성 제고, 복지정책 등 관련 정책 정보의 효율적 전달, 성실신고 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납세의식 제고, 정치와 정부정책에 대한 관심 증대, 증세 시 간접세나 역진세보다 직접세와 누진세 고려 등을 검토할 수 있다.

## 자녀의 혼인에 따른 부모의 지출비용 분석: 지출항목별 분석을 중심으로

양은모·배호중

『사회과학연구』, 46(3), pp. 85~117.

한국사회의 과도한 혼인비용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수의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표성 있는 통계자료인 「재정패널조사(NaStaB)」를 이용하여 혼인 관련 지출액의 가구별 지출 구조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부모가 자녀의 혼인에 따른 지출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녀의 혼인에 따른 부모의 지출에 대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자녀가 혼인하였다고 응답한 가구에서 평균 5,578만원을 혼인비용으로 지출하였다고 응답하여 자녀의 혼인에 따른 부모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물론 혼인 당사자(자녀)의 성별이나 임금수준에 따라 지출액에 큰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혼인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교환의 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은 한국사회에서 다양한 계층 간의 혼인의 가능성보다는 동질혼(Homogamy)에 대한 선호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상당한 액수의 자녀의 혼인을 위한 비용지출은 비혼 및 만혼의 증가와 직결될 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노후자산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의 원만한 혼인 이행은 저출산 문제 완화 및 개인의 생활만족도 향상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청년층을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이승주

『한국행정연구』, 29(4), pp. 199~232.

우리 사회에서 한부모 여성의 경우 아이 양육을 하면서 동시에 생계까지 꾸려야 하는 이중 부담에 시달리기 때문에 현행 근로연계프로그램을 통해 노동유인을 이끌어내고 자립적으로 빈곤에서 탈피하게 만들도록 제도를 기획하기 가장 어려운 집단에 속한다. 특히 현행 선별적 저소득층 지원제도는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급여지급액이 감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히려 저소득 한부모 여성은 소득 증가로 지원혜택이 줄어들까봐 근로유인을 줄이는 유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최근 전혀 새로운 기본소득과 같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의 개혁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자는 움직임들이 보인다. 기본소득은 노동 반대급부 조건 없이 소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때 근로유인이 감소할지 늘어날지에 대해 찬·반 진영 사이에서 열띤 논쟁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이처럼 현행 선별적 복지제도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달성하기 가장 어려운 한부모 여성들이 기본소득을 제공받았을 때 아이 양육의 부담을 덜고 노동을 통해 스스로 자립하고자 하는 유인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현재 나와 있는 다양한 기본소득 모형 중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장기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월 50만원씩 제공하는 방안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제시한 월 6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모형으로 설정하여 노동공급 효과를 시뮬레이션하였다. 해당 분석을 위해 재정패널조사 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이 중 근로 연령층인 18~64세에 해당하는 한부모 여성주만 추출하여 총 277개의 표본을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기본소득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한부모 여성주에게서 근로유인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흥미로운 점은 기본소득 찬성자들이 기본소득 수급자들이 자기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정된 직업을 찾기 때문에 현행 선별적 근로연계 복지제도 하에서 보다 근로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결과도 확인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이 한부모 여성주라는 특정 계층에 갖는 노동공급효과 관련 논의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가구별 특성 및 조세제도 등의 외생적 요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미친 영향의 분석

전병욱

『세무학연구』, 37(4), pp. 103~130.

부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경제적 의사결정인 증여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5~12차년도(2011~2018년) 재정패널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조세적 요인 및 비조세적 요인들이 세대·가족 간의 증여 유형과 그 대상자산 및 규모 등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먼저,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과 관련하여 조세제도의 외생적 요인은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가구별 특성의 영향은 2014년 이후로 분석 기간을 한정할 경우 일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증여자의 기대여명이 증가하거나 기타자산의 시가총액 증가분이 커질수록 현금증여의 가능성이 커지고, 가구순소득이 커질수록 이러한 가능성이 작아지는 것은 특징적인 분석결과이다. 개별 연도의 특성으로 측정한 조세제도의 개편이 증여재산별 증여 사실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세법 개정을 통해 제공하는 조세유인이 증여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거나 비교적 큰 규모의 증여 의사결정의 경우에는 조세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부차적 요인으로 인식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증여금액과 관련하여 일부 가구별 특성은 증여금액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부분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들 중 동일인으로부터의 10년 이내의 재차증여의 경우 증여금액이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증여세액을 부담하지 않으려는 기본적인 조세회피 유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가구순소득이 감소할수록 증여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보유재산에 비해 소득이 낮은 고연령 계층이 주된 증여자인 것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적 요인과 관련해서는 2018년의 신고세액공제율 인하로(7%→5%)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는 증여금액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되지 않은 반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 및 기타 친인척 간 증여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증가한 2016년에 증여금액이 증가한 것은 동일인으로부터의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중과와 함께 납세자들에게 중요하게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증여재산 선택의 의사결정에서 조세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 반면 증여금액 수준을 결정하는 보다 직접적 의사결정에서는 조세적 요인이 납세자들에게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인식된 차이점을 전체적인 분석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다.



## 상속이 기혼남성의 노동공급에 미친 영향

송헌재·조하영·전병힐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2(4), pp. 1605~1615.

근로자의 노동공급에 관련한 많은 연구에서 소득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비근로소득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오차, 혹은 근로자의 일에 대한 선호로 인한 편이가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 그러므로 노동공급의 소득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선호와 무관하고 측정오차가 적은 변수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근로자의 상속 경험을 이용하여 소득효과를 추정하였다. 상속의 경우 상속받는 입장에서 비근로소득으로 인식되며, 일시적으로 큰 규모의 자산이 이전되어 측정오차가 적은 편이고 근로자의 근로에 대한 선호와도 무관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효과를 추정하는데 적합한 변수이다. 재정패널 4~11차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고정효과 패널 모형으로 상속에 따라 우리나라 기혼남성의 연간 근로시간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 상속과 기혼남성의 연간 근로시간 사이에 유의한 음의 관계를 발견하였다. 구체적으로, 상속금액이 100만원 증가할 때 연간 근로시간이 약 0.80시간 정도 줄어든다고 추정되었다. 상속의 효과는 상속 금액이 클 때만 유의하게 나타나며, 상속 당해연도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추정되나 시점에 따라 유의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결과도 확인되었다. 직종 및 가구 소득을 추가적으로 통제한 경우에도 상속의 효과는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기혼남성 근로자의 노동공급 의사결정과정에서 소득효과가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상속·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친 효과

정준호

『동향과 전망』, 109, pp. 193~238.

이 논문은 3~10차 '재정패널조사'를 대상으로 RIF(Recentered Influence Function)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의 측면에서 상속·증여가 가구의 순자산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밝혀진 분석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증여 경험이 있는 가구의 순자산 규모가 그렇지 않은 가구의 그것에 비해 절대적으로 크고, 소득 및 연령 및 기타 인구·사회학적 변수들을 통제할 때도 그렇다. 그리고 순자산분포의 고분위로 갈수록 상속·증여를 받은 가구의 비중이 높아진다.

둘째, 가구 순자산의 축적에서 소득 및 상속·증여의 역할은 중요하다. 소득의 회귀계수는 순자산 분위와 부(-)의 관계를 드러내지만, 상속·증여의 그것은 이와는 달리 증가하는 단조함수 형태를 보여 준다. 상속·증여의 자산축적 효과는 일정 정도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과 무관하다.

셋째, 소득과 상속·증여 변수는 일부 불평등지수들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소득은 저분위에서 자산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더 효과적이다. 반면에 고자산층의 자산축적에서 상속·증여가 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전반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가구의 순자산축적과 불평등을 결정하는 데에 생애주기 모형이 작동하고 있다. 수도권 거주 효과는 순자산 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산축적 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고 또한 저자산층과 고자산층 간의 상대적인 자산격차를 완화하기도 하는 등 양면적이다. 상용직과 같은 종사상 지위는 거의 모든 불평등지수에 대해 불평등 완화 효과를 가진다.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누진제'적 상속·증여세제의 유지, 저소득층의 소득지원 및 자산 형성을 위한 공적지원, 그리고 노동시장의 여건 개선 등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지출이 가구의 자산축적에 미친 영향

정준호·전병유

『사회보장연구』, 36(2), pp. 69~91.

본 연구는 복지지출이 자산축적과 자산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고자 한다. 가구 순자산축적의 주요한 결정요인인 가구 소득, 상속·증여, 인구·사회적 요인 등의 설명변수들을 통제된 상태에서 제도적 요인 중의 하나인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순자산 규모 간의 관계가 부(-)인지의 여부를 위계 선형 모형을 통해서 분석한다. 또한, 순자산 분위별로 두 변수 간 부(-)의 대체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비조건부 분위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한다. 분석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변량 위계 선형 회귀모형에서 지역별 복지지출 비중과 가구의 순자산 규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가 나타난다. 이는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가구 자산축적의 대체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가구 순자산 규모의 지역 간 차이를 설명하는 하나의 요인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순자산 하위 30% 미만에서는 가구가 자산을 축적할 여력이 거의 없으며 가구 자산축적에 대한 복지지출의 대체효과도 사실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대체효과는 순자산 30~70 분위, 즉 광의의 중산층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복지지출이 자산의 불평등을 높일 수도 있다는 함의를 가진다.

### 가구 경제활동유형에 따른 가구의 소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비교 분석

조하영·송헌재·박명호

『재정학연구』, 13(3), pp. 1~32.

본 연구는 각 가구의 특성뿐만 아니라 조세를 상세하게 조사하고 있는 재정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가구 경제활동유형별 가구 세부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영업자 가구는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소득세를 적게 납부하지만 소득의 변동성이 크며, 자산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고 재산세를 더 많이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만 아니라 소비액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부가가치세 또한 더 많이 납부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자영업자 가구와 근로소득자 가구가 납부하는 소득세에 차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표면적으로 조세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한편으로는 변동계수로 추정한 자영업자가구의 소득 변동성이 근로소득자 가구보다 대략 33% 높게 나타난 것으로 미루어 보아 불안정성에 대한 보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과 전세가 귀착효과

최충익·김철민·이동관·김천일

『감정평가학논집』, 19(3), pp. 29~47.

본 논문은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과 전세가 귀착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하고 있다. 보유세 개편을 두고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졌지만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보유자에게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에 대한 담론과 보유세가 상승할 경우 이를 세입자에게 전가시킬 것인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택 보유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파악을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역진성 및 전세가 귀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고 있다. 분석자료로 주택소유자 개별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마이크로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 주택보유자의 특징을 분석하고 서울시 전세 실거래가를 토대로 부동산 보유세의 전세가 귀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소득계층별 보유세 부담의 역진성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재정패널자료를 통해 주택보유가구의 보유세 부담을 소득수준별에 따라 분석한 결과 가구소득 1분위부터 4분위까지 소득계층별 세부담의 역진성이 발견되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아닌 아파트에 비해 전세가격이 높지 않게 나타났으며, 종부세 부과에 따른 전세금 전가효과는 분석결과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전가시킬 만큼의 충분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으며, 종부세가 충분히 증가할 경우 전세금으로의 전가효과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음을 시사한다.

###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한 기부금 가격탄력성 추정: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의 전환 사례를 중심으로

홍우형

『재정학연구』, 13(4), pp. 31~61.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존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정패널 4~10차 자료를 활용하여, 기부행위의 지속성을 고려할 수 있는 Arellano and bond(1991)의 모형을 적용한 기부금 가격탄력성을 추정하고, 기부금 세액공제 전환의 정책적 실효성을 평가하였다. 분석대상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한 근로자에 한정하여 추정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기부행위에 상당한 지속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부금 탄력성은 1.2로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 기부금 탄력성을 추정한 결과, 조세유인이 증가한 저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비탄력적이고 조세유인이 감소한 고소득층의 가격탄력성은 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액공제로의 전환이 순기부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보이고 있어, 기부금 공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험이 순기부액 측면에서 비효율적이었다는 결론을 지지한다.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 한 국 조 세 재 정 연 구 원

발 행 일 : 2021. 4. 30.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 재정패널DB팀

주 소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반곡동)

배포문의 : panel@kipf.re.kr, 044-414-2473

홈페이지 : <https://www.kipf.re.kr/panel/>



